

이슈페이퍼

---

# 대졸 청년층의 졸업 직후 창업 실태 분석 및 정책 제언

황성수 · 류지영

---

# 대졸 청년층의 졸업 직후 창업 실태 분석 및 정책 제언

황성수 · 류지영



## 대졸 청년층의 졸업 직후 창업 실태 분석 및 정책 제언

황성수<sup>1)</sup> · 류지영<sup>2)</sup>

### 〈 목 차 〉

I. 배경 및 문제점 .....	2
II. 분석 모형 및 결과 .....	5
III. 정책 제언 .....	15
IV. 기대효과 .....	22
참고문헌 .....	23
[부록 1] 선행연구 .....	25
[부록 2]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 .....	26
[부록 3] 기술창업 선택확률 모형 분석결과 .....	31
[부록 4] 창업 선택확률 모형 .....	33
[부록 5] 각종 부표 .....	35

대졸 청년층의 졸업 직후 창업 중에 서비스업종의 자영업형 창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기술창업의 비중이 낮아 추가고용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사업기회가 작고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현실에서 창업, 특히 기술창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함. 창업정신 고양을 통한 기술창업의 확산이 지속가능 경제로 가는 해답임.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의 개선, 개선된 창업 여건 홍보 및 발굴된 성공창업의 홍보, 재창업 및 재취업의 기회제공 및 지원정책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주제어: 대졸 청년층 창업, 창업선택 경로, 기술창업선택확률, 기술창업 및 혁신형 창업, 일자리 창출, 창업 중심사회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E-mail: hss@krivet.re.kr)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E-mail: jyryu@krivet.re.kr)

## I. 배경 및 문제점

### 1. 배경

대학설립 자율화 이후 문제가 증폭된 과잉학력과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의 미스매치로 대졸 청년층의 실업과 일자리의 질 저하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표 1-1> 학력별 실업자 수

(단위: 천 명)

		2000	2001	2002	.....	2008	2009	2010	2011
전 체		979	899	752	.....	769	889	920	855
중졸이하		244	203	148	.....	118	130	154	133
고졸		505	462	380	.....	384	437	420	398
대졸 이상	전체	230	233	224	.....	268	321	346	323
	20~29세	129	133	129	.....	147	165	168	15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난해 대졸 이상 실업자는 32.3만 명으로 2010년 보다는 약간 줄어들었으나 2000~2002년 사이에 23만 명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약 10만 명 가량 늘어난 셈이다. 특히, 대졸 청년층을 대변하는 20~29세 사이의 대졸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로 거의 3만 명이나 늘어났으며 전체 실업에서 대졸 청년층(20~29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3.2%에서 2011년 18.5%로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해소 및 고용안정 방안에 집중하고 있으며, 더불어 계속되는 일자리의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창업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중 창업에 대한 정부의 기대는 매우 높은 상황으로 창업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의 유연성과 혁신성을 제고시키고 더 나아가 직업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를 가능하게 하며, 더불어 개별 경제주체의 독립적 발전의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사회 안전망의 역할 수행으로 사회적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서도 기능하기 때문이다.

창업관련 동향을 살펴보면, 2004~2009년 기간 중 우리나라 사업체는 연평균 59만 5,336개 사업체가 창업하였고, 동 기간 휴·폐업한 사업체는 연평균 57만 7,501개로 나타나고 있다.<sup>3)</sup>

3) 통계청, 「2004~2009 사업체 생성·소멸 현황 분석」

신설법인수는 2011년 65,110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30세 미만 청년 창업의 경우 2008년 2,027(4%), 2009년 2,417(4.3%), 2010년 3,117(5.2%) 등으로 증가세이나, 2011년의 경우 2,823(4.3%)로 전년대비 △9.4% 감소<sup>4)</sup>하였다.

<표 1-2> 연도별 신설법인·부도법인 동향

(단위: 개)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신설 법인수	61,852	52,739	48,585	52,587	50,512	53,483	50,855	56,830	60,312	65,110
부도 법인수	2,710	3,214	2,747	2,200	1,630	1,507	1,886	1,364	1,143	1,359

자료: 중소기업청, 신설법인동향, 한국은행, 어음부도율동향

GEM(2011) 보고서에 따르면<sup>5)</sup>, 미국, 독일, 일본 등 23개 선진국 그룹(Innovation-driven Economies)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창업 사업체수 비중에 있어서 그리스(15.8%) 다음으로 높은 수준(10.9%, 선진국 평균 7.2%)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창업 준비 및 창업 후 3.5년 미만 사업체를 합한 초기 기업가 활동지수(TEA,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에 있어서도, 미국(12.3%), 호주(10.5%), 네덜란드(8.2%), 그리스(8.0%), 대만(7.9%) 등에 이어 다소 높은 수준인 7.8%(선진국 평균 6.9%)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창업동기는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생계형 창업(Necessity-driven Motives)이 급격히 감소하고 성장형 창업(Improvement 또는 Opportunity-driven Motives)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선진국 그룹에 포함된 우리나라의 경우 생계형 창업은 41.5%(전체 1위, 평균 17.6%)로 가장 높은 반면, 성장형 창업은 36.2%(전체 23위, 평균 57.0%)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Adult Population Survey에서, 우리나라 성인들이 생각하는 사업기회(11.2%, 선진국 평균 34.9%)나 사업체 운영능력(26.7%, 선진국 평균 40.6%)은 매우 낮은 반면,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45.1%, 선진국 평균 38.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괄호 안은 신설법인 중 30세 미만 청년창업의 비중

5)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2011 Global Report'

## 2. 문제점

창업은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구조의 매개고리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성장의 토대를 제공하고 사회적 문제의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황성수, 2011) 그러나 현실에서의 창업은 생계형 창업과 성장형 창업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그 중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게 되면 과도하게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져 국가 전체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될 뿐 지속성장의 토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졸 미취업자의 큰 폭의 증가와 맞물려 청년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제 대졸 청년층의 졸업 직후 창업의 특성 규명이 절실히 필요하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수행된 바 없었다.

결국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졸업 직후(졸업 1년 후, 3년 후 시점) 경제활동에서 창업으로 또는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로를 파악하며, 동시에 대졸 청년층의 졸업 직후 창업이 바람직한지<sup>6)</sup>, 특히 창업 선택확률(기술창업<sup>7)</sup>은 학력별·성별·출신대학소재지별·전공일치여부별·전공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여 대졸 청년층의 졸업 직후 창업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

6) 바람직하다는 기준은 자발적(pulled) 창업으로 추가적인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수준의 성장형 창업을 의미하며, 반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일자리를 선택하지 못하여 비자발적(pushed)으로 자기고용(self-employment) 조차 버거운 생계형 창업을 의미함.

7) 본고에서는 기술창업을 이공계출신의 전공일치를 보이는 창업이라 정의, 물론 기술력을 갖춘 창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정의가 필요하나 가용 정보의 한계로 단순화함.

## II. 분석 모형 및 결과

### 1. 창업의 이동 경로 분석<sup>8)</sup>

졸업 직후 1년 시점에 창업을 선택한 청년층이 졸업 이후 3년 시점에서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는지, 반대로 졸업 이후 3년 시점에 창업을 선택한 이들은 졸업 직후 1년 시점에서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였는지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경제활동 상태를 단순화하여 <표 2-1>과 같은 영역(categorizing)으로 나누었으며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와 전문대학의 졸업자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2-1> 경제활동상태 구분

임금근로자	그룹 I	대기업-정규직, 공공기관-정규직
	그룹 II	중소기업-정규직 및 소속 관계없이 비정규직 전체
비임금 근로자		창업 (자영업자 및 고용주)
기타	실업	실업
	비경활	비경제활동

일반대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를 나누어 직업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졸업연도별 또는 학력별로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먼저 졸업 후 1년 시점에서 창업을 선택한 청년층의 경제활동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대학 졸업자의 창업유지율보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창업 유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창업을 선택하였다가 임금근로자로 이행하는 비율과 창업을 유지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실업 포함)상태로 변화하는 비율 모두 일반대 졸업자의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졸업 후 1년 시점에 창업을 선택하였다가 졸업 후 3년 시점에 임금근로자로 변경한 또는 창업을 유지한 그룹들의 그룹내 만족도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반대로 졸업 후 1년 시점에 창업이외에 임금근로자를 선택하였다가 졸업 후 3년 시점에서 창업을 선택한 졸업자들의 그룹 내 만족도 평균차이가 유의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다. 이는 졸업 후 1년 시점에서의 창업보다는 임금근로자로서의 경력을 토대로 하는 창업에서 개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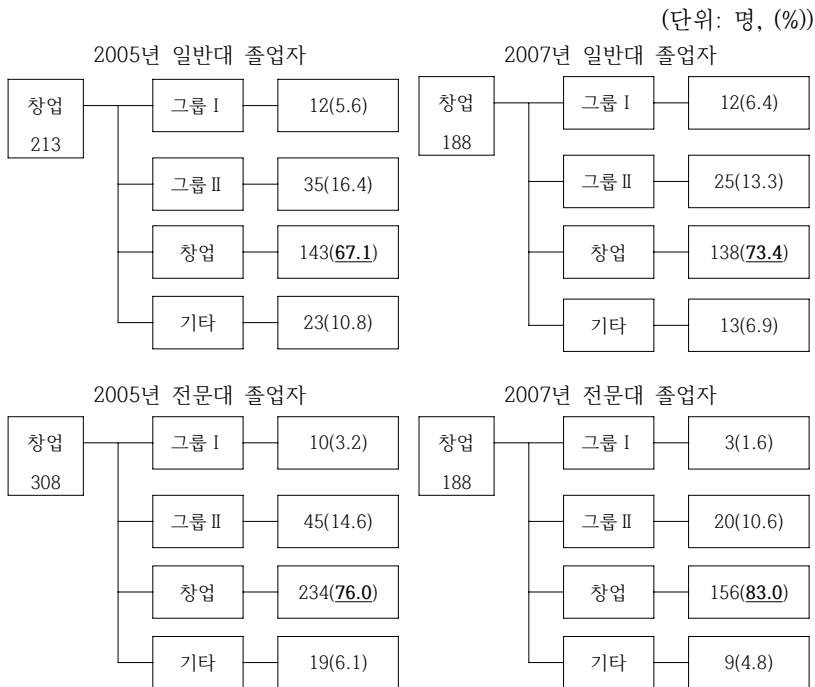
8) 선행연구는 주로 창업 동기, 대졸 청년층의 직업이동 경로 등 관련 연구로 이루어짐. 부록 참조



이상의 통계를 통해, 창업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가능성에서 학력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과 따라서 창업 이후 2년의 창업유지를 창업성공률의 대리변수로 보기에에는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sup>9)</sup>

졸업 후 1년에서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상태인 청년층이 졸업 후 3년 시점에서 창업을 선택한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대 졸업자의 경우 2005년, 2007년 각각 1.6%에 불과하나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그 비율이 2.8%, 4.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때 생겨난 창업 중 상당수는 눈높이에 맞는 임금근로자로의 이행이 어려워 시작하게 된 생계형 자영업 창업(183명, 전체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14%)일 수 있다. 또한 취업난으로 인해 발생한 이러한 형태의 창업은 베이비 붐 세대의 생계형 창업과 더불어 사회문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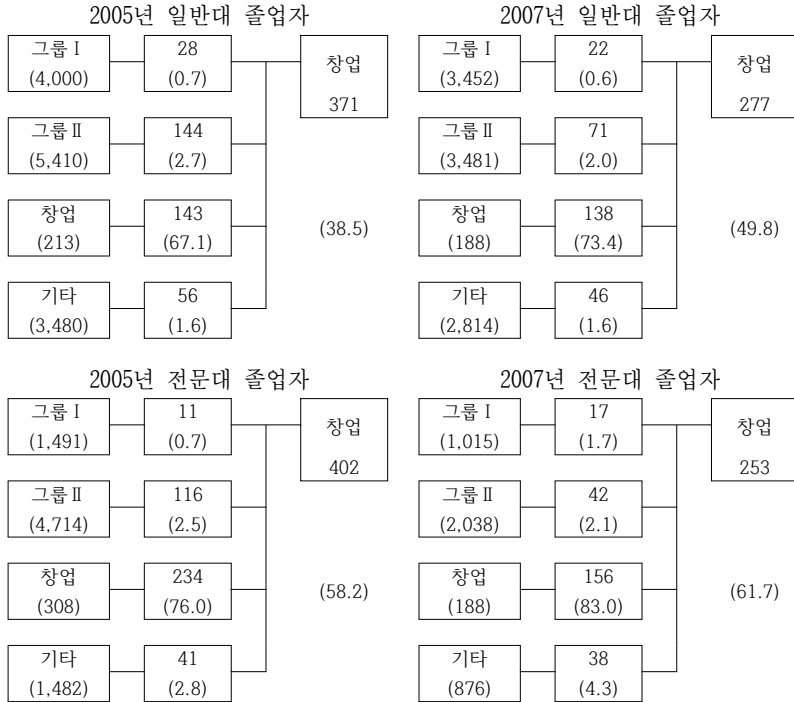
<그림 2-1> 졸업 직후 창업에서 졸업 이후 3년 시점에서의 경제활동 변화<sup>10)</sup>



9) 졸업 직후 1년 시점에서 창업을 선택하고 이를 유지하여 졸업 이후 3년 시점에서 창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음(유의하지도 않음, 부록 참조)

10) 그룹 I에서의 변화, 그룹 I로의 변화 등 창업 이외의 경로변화는 부록 참조

<그림 2-2> 졸업 이후 3년 시점에 창업을 선택한 청년층의 졸업 직후 1년 시점에서의 경제활동 내역  
(단위: 명, (%))



<표 2-2> 졸업 이후 3년 시점에 창업을 선택한 청년층의 졸업 직후 1년 시점에서의 만족도 차이<sup>11)</sup>

구분	그룹 I	⇒	창업	관측수	Std. Dev.	t-value
			4년제	67.50	⇒	75.50
4년제	그룹 I + 중소기업 정규직	⇒	창업	관측수	Std. Dev.	t-value
	68.78	⇒	73.16	217	28.12	-2.2931*
	임금근로자 전체	⇒	창업	관측수	Std. Dev.	t-value
	68.40	⇒	72.55	265	27.38	-2.4678*
전문대	그룹 I	⇒	창업	관측수	Std. Dev.	t-value
	64.29	⇒	65.18	28	28.45	-0.1661
	그룹 I + 중소기업 정규직	⇒	창업	관측수	Std. Dev.	t-value
	67.03	⇒	70.47	160	25.00	-1.7394
전문대	임금근로자 전체	⇒	창업	관측수	Std. Dev.	t-value
	66.35	⇒	70.14	185	24.98	-2.0599*

- 주: 1. 그룹 I : 대기업-정규직, 공공기관-정규직  
 2. 임금근로자 전체: 비정규직 포함  
 3. \*\* 신뢰도 99%, \* 신뢰도 95%  
 4. 졸업연도 구분없이 졸업 직후와 졸업이후 3년으로 구분

11) 졸업 직후 창업을 선택한 졸업자의 3년 이후의 경제활동상태별 만족도차이는 부록참조

### 3. 분석 모형<sup>12)</sup>

통계조사에서 조사대상의 일부만을 관측하고도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에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확률의 개념이다. 또한 사회현상은 개별 선택의 연속에 불과하다(Choice Theory: Davidoff)는 이론을 근거로 직업선택 특히 창업에 있어서도 개별 의사결정 주체인 대졸 청년층의 선택확률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졸업 직후(1년 또는 3년 시점) 대졸 청년층의 창업확률 더 나아가 기술창업확률을 구하고자 확률선택모형 중에 다항로짓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다항로짓회귀모형(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은 기본적으로 아래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대안들의 집합(a set of alternatives)으로부터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첫째, 대안들의 집합에 포함된 대안들의 수가 한정적일 것

둘째, 의사결정 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은 상호배타적으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면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없어야 함

셋째, 모든 가능한 대안들은 대안의 집합 속에 포함되어야 함

위 기본적인 조건 중에 첫째와 셋째는 만족한다고 볼 수 있으며, 두 번째 조건 중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면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특정 시점(조사 시점)에 한해서는 만족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창업 이외에 임금근로자(특히, 대기업 정규직)로의 직업선택은 의사결정 주체의 선택에 추가적으로 해당 기업의 선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창업 역시 의사결정 주체의 선택에 부가적인 조건으로 예산제약이 추가될 수 있다.

앞서의 문제는 일반적인 확률선택모형에서도 종종 등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유형과 주거입지 선택의 다항로짓모형에서 강남의 아파트와 강북의 아파트를 선택할 때 예산제약으로 인해 특정 지역이 선택불가능한 의사결정자 또한 존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통수단의 선택과정<sup>13)</sup>에서 승용차 4대 보유자와 승용차를 가지지 못한 의사결정자간의 선택확률<sup>14)</sup>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본 연구는 창업선택에 주안점을 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대기업을 선택하는 확률을 밝히고자 계획된 것은 아니다.

---

12) 실증분석의 분석자료(GOMS) 및 기초통계는 부록 참조

13) 승용차, 지하철, 버스로 종속변수 가정

14)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주체의 소득(자산), 나이, 승용차보유대수 등이 통제변수로 활용됨

다만, 앞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졸 청년층의 직업이동 경로 및 창업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 등의 선행연구에 밝혀졌던 주요 변인(가구소득, 연령, 대학학점, 부모학력 등)을 토대로 유의적인 통제변수를 구성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였다. 따라서 공변량(주요 변인)으로 통제되고 난 이후, 요인(대학학력·대학소재지·전공·전공일치도·성별)별로 창업선택확률 나아가 기술창업선택확률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졸업 직후 대졸 청년층의 창업선택확률모형은 다음과 같은 다항로짓회귀모형의 형태를 가진다.

$$Y_j = \beta_0(k_{ij}) + \beta_1 X_{1i} + \beta_2 X_{2i} + \beta_3 X_{3i} + \beta_4 X_{4i} + \beta_5 X_{5i} + \epsilon_i$$

여기서,  $Y_j$ 는  $j = 1 \dots 3$  ( $1 =$  대기업,  $2 =$  중소기업,  $3 =$  창업)

$\beta_0$ 는 절편값<sup>15)</sup>은 설명변수  $X$ 값이 모두 0인 경우의 값에 모형에 삽입된 통제변수  $k_{ij}$  (부모학력, 가구소득, 대학학점 등)의 영향력이 반영된 값을 의미: 대학소재지가 지방소재, 여성, 전문대, 비이공계, 전공불일치)

$X_{1i}$ 부터  $X_{5i}$ 까지가 대학소재지, 성별, 학력별, 전공별, 전공일치여부별 요인 변수

본 모형은 졸업 직후 대졸 청년층의 기술창업 선택확률을 추정하고자 만들어졌기 때문에 설명변수 중에 반드시 전공일치도가 포함되어야 가능하다. 이는 기술창업의 정의<sup>16)</sup>를 이공계출신이면서 현재 직무에 전공일치를 보이는 창업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한계로부터 기술창업 선택확률의 모수는 전체 졸업자 수가 아닌 취업자(전공일치도 데이터가 존재) 수가 되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기술창업 선택확률은 어디까지나 취업자를 기준으로 살펴본 것이다.

### 3. 분석결과 및 기술창업 선택확률의 추정

먼저 다항로짓모형의 적합도는  $-2\text{Log우도}(-2 \log \text{likelihood, 이하 } -2LL)$ 의 값이 낮을수록 적합도가 높는데, 모형의 설명변수가 삽입되기 전인 절편만 있을 경우에서  $-2LL$ 이 설명변수가 삽입된 최종모형에서의  $-2LL$ 과 비교할 때 최종모형에서  $-2LL$ 의 값이 유의적으로 낮아졌는가를 검정하는 우도비검정 결과 최종모형에 적합도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15)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의 절편값과는 의미가 다름에 주의

16) 엄밀히 기술창업을 정의하는 것은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기술창업 업종, 특허 등 기술보유 여부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파악되어야 가능할 것임

있어 모형은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모형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분석결과에서는 대기업 기준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전공일치도가 유의적이지 않았으며 대기업 기준 창업에서 성별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변수별 우도비 검정

효과	모델 맞춤 기준	우도비 검정		
	축소모형의 -2 Log 우도	카이 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	38,370.292a	0.000	0	
연령	39,221.276	850.984	2	.000
대학학점	38,475.675	105.383	2	.000
부모학력	38,396.272	25.980	2	.000
가구소득	38,482.474	112.182	2	.000
전공(이공계/비이공계)	38,523.974	153.682	2	.000
성별(남성/여성)	38,421.541	51.249	2	.000
학력(대졸/전문대졸)	38,921.498	551.206	2	.000
학교소재지(서울/지방)	38,680.513	310.221	2	.000
전공일치도(일치/불일치)	38,375.457	5.165	2	.076

<표 2-4> 모형 적합정보

모형	모델 맞춤 기준	우도비 검정		
	-2 로그 우도	카이 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 만	41,161.585			
최종모형	38,370.292	2791.293	18	0.000

<표 2-5> 분석 결과표

구분 <sup>a</sup>	B	표준 오차	Wald	자유도	유의 확률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중 소 기업	절편	3.212	.127	644.462	1	.000			
	연령	-.045	.004	157.317	1	.000	.956	.950	.963
	졸업학점	-.122	.012	104.065	1	.000	.885	.865	.906
	부모학력	-.012	.002	25.716	1	.000	.988	.983	.992
	가구소득	.000	.000	44.557	1	.000	1.000	1.000	1.000
	이공계	-.265	.028	88.917	1	.000	.767	.726	.811
	비이공계	0 <sup>b</sup>			0				
	남자	-.203	.030	46.015	1	.000	.816	.770	.865
	여자	0 <sup>b</sup>			0				
	일반대	-.701	.031	519.715	1	.000	.496	.467	.527
	전문대	0 <sup>b</sup>			0				
	서울소재	-.556	.033	280.490	1	.000	.573	.537	.612
	지방소재	0 <sup>b</sup>			0				
	전공일치	.016	.027	.364	1	.546	1.017	.964	1.072
전공불일치	0 <sup>b</sup>			0					
창 업	절편	-.911	.066	226.360	1	.000			
	연령	.084	.004	356.175	1	.000	1.088	1.079	1.098
	졸업학점	-.052	.026	3.988	1	.046	.950	.903	.999
	부모학력	-.009	.005	3.125	1	.077	.991	.981	1.001
	가구소득	.001	.000	40.869	1	.000	1.001	1.000	1.001
	이공계	-.624	.062	102.091	1	.000	.536	.475	.605
	비이공계	0 <sup>b</sup>			0				
	남자	.022	.063	.124	1	.725	1.022	.904	1.157
	여자	0 <sup>b</sup>			0				
	일반대	-.673	.065	108.448	1	.000	.510	.449	.579
	전문대	0 <sup>b</sup>			0				
	서울소재	-.692	.082	71.954	1	.000	.501	.427	.587
	지방소재	0 <sup>b</sup>			0				
	전공일치	-.115	.059	3.819	1	.051	.892	.795	1.000
전공불일치	0 <sup>b</sup>			0					

- a. 참조 범주는 대기업.
- b. 이 모수는 중복되었으므로 0으로 설정됩니다.

〈표 2-5〉 분석결과표의 절편값의 의미를 설명하면 요인변수가 모두 0일 경우, 가질 수 있는 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업의 절편값(-.911)이 의미하는 바는 비이공계·여자·전문대·지방소재·전공불일치인 취업자의 창업에 대한 로짓으로 0.401983으로 나타났다.

$$\begin{aligned} \log\left(\frac{P(\text{창업})}{P(\text{대기업})}\right) &= -.911 \\ \Rightarrow \frac{P(\text{창업})}{P(\text{대기업})} &= e^{-.911} = 0.401983 \end{aligned}$$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절편값(3.212)이 의미하는 바는 비이공계·여자·전문대·지방소재·전공불일치인 취업자의 중소기업 선택에 대한 로짓으로 24.81748로 나타났다.

$$\begin{aligned} \log\left(\frac{P(\text{중소기업})}{P(\text{대기업})}\right) &= 3.212 \\ \Rightarrow \frac{P(\text{중소기업})}{P(\text{대기업})} &= e^{3.212} = 24.81748 \end{aligned}$$

마지막으로 대기업이 기준(0)이 되었으므로 1이다.

$$\begin{aligned} \log\left(\frac{P(\text{대기업})}{P(\text{대기업})}\right) &= 0 \\ \Rightarrow \frac{P(\text{대기업})}{P(\text{대기업})} &= e^0 = 1 \end{aligned}$$

따라서 앞서 비이공계·여자·전문대·지방소재·전공불일치인 취업자의 창업확률 계산과정은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P(\text{창업}) &= \frac{\frac{P(\text{창업})}{P(\text{대기업})}}{\frac{P(\text{창업})}{P(\text{대기업})} + \frac{P(\text{중소기업})}{P(\text{대기업})} + \frac{P(\text{대기업})}{P(\text{대기업})}} \\ \Rightarrow P(\text{창업}) &= 1.53\% = \frac{0.401983}{0.401983 + 24.81748 + 1} \end{aligned}$$

이를 원용하여 다음은 이공계출신·남자·서울소재대학·일반대·전공일치를 보이는 취업자의 창업 선택확률을 구하여 보겠다.

먼저 창업의 로짓을 구하면 0.050125

$$\log\left(\frac{P(\text{창업})}{P(\text{대기업})}\right) = -0.911 + (-0.624) + (0.022)^{\text{생략가능}} + (-0.673) + (-0.692) + (-0.115)$$

$$\Rightarrow \frac{P(\text{창업})}{P(\text{대기업})} = e^{-2.9932} = 0.050125$$

여기서 0.022라는 남성의 요인변수가 유의적이지 않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나  $\text{Exp}(\beta)$ 의 값이  $\text{Exp}(\beta)$ 의 95% 신뢰구간내에 존재하고 또한 그 설명력의 반영값이 미미하여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음 중소기업의 로짓을 구하면 4.19446

$$\log\left(\frac{P(\text{중소기업})}{P(\text{대기업})}\right) = 3.212 + (-0.265) + (-0.203) + (-0.701) + (-0.556) + (0.016)^{\text{생략가능}}$$

$$\Rightarrow \frac{P(\text{중소기업})}{P(\text{대기업})} = e^{1.4860} = 4.419446$$

따라서, 이공계출신·남자·서울소재대학·일반대·전공일치를 보이는 취업자의 창업선택 확률은 0.9164%로 추정된다.

$$\Rightarrow P(\text{창업}) = 0.9164\% = \frac{0.050125}{0.050125 + 4.419446 + 1}$$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 가지 모형<sup>17)</sup>을 활용하였다. 하나는 요인변수로 활용하였던 성(gender) 통계량을 공변량으로 넣고 남·녀 구분없이 기술창업 선택확률을 구하였으며 전공일치여부와 성(gender) 통계량을 공변량으로 넣고 전체 창업 선택확률을 구하였다. 도출된 확률값을 가지고 취업률이 제공되는 2010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전공별·지역별·학력

17) 부록에 제시



별 창업자수 및 기술창업자수를 추정<sup>18)</sup>하여 보았다.

<표 2-6> 기술창업 선택확률 및 기술창업자수 추정

(단위: 명, %)

전공	학력	대학 소재지	졸업자	비경활	취업자	취업률	창업확률	창업자수	기술 창업확률	기술 창업자수
이공계	일반대	서울	23,391	5,216	11,368	62.5	0.950	108	0.872	99
		지방	79,665	10,691	40,245	58.3	1.177	474	1.082	435
	전문대	서울	5,253	343	2,836	57.8	1.017	29	0.935	27
		지방	47,327	3,429	25,452	58.0	1.214	309	1.117	284
비이공계	일반대	서울	42,044	5,056	18,124	49.0	1.414	256		
		지방	124,974	10,341	51,637	45.0	1.722	889		
	전문대	서울	10,857	708	5,050	49.8	1.484	75		
		지방	97,171	8,290	45,937	51.7	1.753	805		
계			430,682	44,074	200,649	51.9	1.468	2,946		845

주: 1. 창업확률 및 기술창업확률의 모수는 졸업자수가 아닌 취업자수임에 주의  
 2. 비이공계에는 의학계열 제외

출처: 취업률, 졸업자수, 취업자수 통계는 대학교육협의회 대학별 원시자료

추정결과 졸업 이후 3년 이내에 창업을 선택한 대졸 청년층 중에 기술창업의 비중은 약 28.7%에 불과하였다. 융합이 보편화된 시기에 특정 전공(이공계) 출신만이 기술창업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대졸 청년층의 졸업이후 3년 시점까지 기술창업을 시도한 총 수가 1,000명(추정값 845명)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창업지수(TEA)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창업에 대한 두려움 역시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다고 제시한 GEM(2011)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18) GOMS자료를 2005년 졸업자, 2007년 졸업자의 졸업 후 1년, 3년 시점 모두를 pooling하여 가중치를 반영하지 못한 점과 특정 시점에 국한된 데이터의 결과값으로 다른 시기의 값을 추정하는 것에 무리가 따를 수 있음. 다만 전체 창업 중에 기술창업의 선택확률을 통해 기술창업을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여 보고자 하였음.  
 추가로 분석대상이 되는 시기의 취업률을 각기 학력별 지역별로 나누어 통제한 결과 거의 상수값으로 처리되어 유의하지 않았으며, 실질경제성장률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임.

### III. 정책 제언

생계형 창업을 통한 자영업자는 경기악화에 따른 일시 해고자와 은퇴를 시작한 5~60대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창업은 준비된 창업이라기보다는 당장의 생계를 위한 창업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졸업 직후 대졸 청년층 역시, 임금근로자로의 원활한 진입이 어려워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창업에 다수 진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추정결과를 다시 언급하면 졸업 이후 3년 이내에 창업을 선택한 대졸 청년층(2,946명) 중에 기술창업의 비중은 약 28.7%(845명)에 불과하였다. 대졸 청년층의 졸업이후 3년 시점까지 기술창업 선택 확률에 따른 총 수가 전체 이공계 졸업자 155,636명 중에 1,000명(추정값 845명, 약 0.54%)<sup>19)</sup>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기술창업의 비중이 높아져야 할 청년층 창업이 기술창업보다는 서비스업종의 생계형 창업에 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창업비율이 선진국(23개국) 평균 보다 높으나 성장형 창업의 비중은 최하위(23위)임을 보여준 GEM(2011)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을 창업한 개인 사업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3.4년, 생존비율은 24.6%에 불과한 것도 커다란 문제<sup>20)</sup>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등에 편성되어 있다. 그 중 중소기업청은 대부분 기존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및 진입 지원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사회보장체계 지원을 위한 사업은 농어민을 위한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국한되어 있다.

자영업자 지원사업과 유사하게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사업 역시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교육지원 사업과 자금지원 대책, 인프라 및 기술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청년창업 교육 지원사업에는 창업교육, 창업경진대회, 창업사업화 지원 등이 있다. 창업교육에는 중소기업청 지원의 대학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대학지원, 기술창업학교가 있고, 문화관광부의 뉴미디어 창업스쿨과 서울시 하이서울창

19) 비이공계 졸업자 275,046명 중에 창업확률로 추정된 창업자 2,025명(약 0.74%)으로 기술창업 보다 창업비율이 높게 나타남(도소매음식숙박업 다수 포함)

20)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개인사업자 창.폐업 특성 및 현황 분석」 2012.10

업스쿨 등이 대표적이다. 경진대회로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 창업 경진대회와 고용노동부의 소셜벤처 경연대회가 있다. 사업화 지원으로는 중소기업청의 예비 기술 창업자를 대상으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 사업이 대표적이고 서울시의 2030 청년 창업 프로젝트사업도 2010년에 192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2011년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중소기업청이 주관하여 3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부록 참조)

기술창업(또는 혁신형 창업)을 위시하여 창업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살펴본 바, 연계 측면과 정확한 목표 집단 선정, 집행과정 상의 여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이지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창업 중심에서 추가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기술창업(또는 혁신형 창업) 중심으로의 이행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지적되는 것은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고착’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된 근원과 배경을 고려하여 사회 전체의 창업에 대한 인식 전환(Paradigm Shift)을 위한 정책방안이 요구된다.

결국, ‘창업정신(Entrepreneurship or Frontier Mind)이 인정받고 중용되는 사회가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창업정신이 충만한 사회에서는 경제발전의 추진력인 ‘창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졸 청년층의 기술창업,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혁신형 창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창업에 대한 인식전환’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제안 1) 창업에 대한 인식 전환

앞서 GEM(2011)의 Adult Population Survey에서 우리나라의 창업에 대한 지표 중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을 다시 살펴보면, 선진국 평균 34.9%이 비해 낮은 11.3%(23개국 중 Bottom 3)의 ‘사업기회’, 선진국 평균 38.1%에 비해 가장 높은 45.1%(Top 1)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사업기회가 어떤 이유로 선진국 중에 최하위를 간신히 면할 정도로 낮은지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개발경제 시대가 최근 또는

동시대적이어서 현재의 사업기회가 과거 시점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되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여 수요 및 공급 독점적 구조를 구축한 상태에서 문어발식 확장(예를 들면, 동네 빵집까지) 지속,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기술 및 인력 빼오기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되다보니 사업 기회에 대한 체감도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23개 선진국 가운데 최고수준을 보이는 이유에 대한 설명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앞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언론노출과 관계된 것으로 부도를 맞고 삶이 피폐해진 중소기업CEO의 모습에서 안정된 임금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이유일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 간 복지수준 및 노동시장에서의 차이로 밝혀낼 수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23개국 평균값(38.1)보다 낮은 국가는 스위스(30.6), 슬로베니아(31.1), 미국(31.2), 핀란드(32.0), 아일랜드(33.2), 스웨덴(34.6) 순이었다. 여기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북유럽 국가로 실업급여 등 전통적으로 복지가 확충된 국가라 볼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은 실업급여 등의 복지는 미흡하지만 노동시장이 유연하여 경력단절자(창업 실패로 인한)라고 해서 재취업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국가 전체의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거두어 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제도적으로 막아 창업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여 ‘창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두 번째로 기술창업(혁신형 창업)이든 서비스 업종의 자영업 창업이든 창업 실패 이후, 재기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하며 또한 임금근로자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재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제와 더불어 임금근로자로의 이동에 적극적인 지원책<sup>21)</sup>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영세자영업자의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임금근로자로의 전이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의 재 정비 역시 필요하다.

### ■ 세부 제언 1-1)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

최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인력 빼오기(poaching)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부처간에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특정 부처는 인력양성에 따른 비용(이후, 이적료라 가칭)을 대기

21) 예를 들면, 기술창업 실패자에 대한 관련 업종 취업 시 임금보전 등

업이 중소기업에 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부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동 제도의 찬반<sup>22)</sup>은 차후에 논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유출 문제가 기술유출 또는 영업비밀의 노출 등으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배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숙련인력의 유출에 불과한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구분하여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억울함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위 사항(인력유출로 한정할 것인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중재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 즉 중소기업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불공정거래로 보이는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거래관계의 종속 등의 하도급계약 역시, 중소기업 스스로 입증하기란 요원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거래의 행위자인 대기업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일벌백계(一罰百戒)를 단행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공정위의 수사권과 수사력의 한계가 원인이라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나서서 입증에 필요한 물적·질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판단된다.

## ■ 세부 제언 1-2) 창업 여건 개선 및 성공 창업의 홍보 확대

선행연구인 박동 외(2010)의 연구결과에 제기된 '주변에 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창업을 계획할 확률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4.233배나 높았다는 사실'과 '사업기회'가 23개 선진국 중에 거의 최하위에 이르는 결과에 대한 해석<sup>23)</sup>은 그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공정거래를 실현하고 창업하기 좋은 여건에 대한 홍보, 창업성공의 모델(Best Practice)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창업이 국가 경제는 물론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주된 통로임을 알릴 필요가 제기된다.

22) 반대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 첫째, 이적료가 책정될 경우 대기업의 기술인력 빼가기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문제
- 둘째, 이적료가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으로의 입직이 줄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문제
- 셋째, 이적료 산정이 매우 어려우며, 양자간(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문제

23)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예를 들면, 동네 빵집까지) 지속,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기술 및 인력 빼오기, 불공정거래 관행 등의 지속적 언론 노출

■ 세부 제안 1-3) 재창업의 기회제공

앞서 GEM(2011) 보고서의 내용을 다시 환기시키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점과 이에 대한 해석은 노동시장의 메커니즘과 한편으로는 실업급여 등의 복지수준과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지만 재창업의 기회제공 역시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어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R&D 중심의 기술창업은 그 성공확률이 높지 않지만 고용창출을 선도하는 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성장가능하다. 따라서 다수의 기술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재창업의 기회제공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래 한국과 일본, 미국의 창업실패 중소기업인 지원제도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취사선택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표 3-1> 실패 중소기업인 지원제도 한국, 미국, 일본의 비교표<sup>24)</sup>

○ 한국: 대표이사 연대보증 제도 등 때문에 패자부활이 어렵고 벤처패자부활제, 회생지원권설등 등 정부주도에 의한 사후처리 중심
○ 일본: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제등으로 실패기업인의 부활이 쉽지 않고 제도전 지원 사업이나 실패 벤처기업데이터베이스구축 등 정부주도에 의한 사후처리 중심
○ 미국: 경영자가 리스크를 지는 것이 아니고, 투자가가 리스크를 지는 사회 실패한 기업·개인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하고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여 기업가정신을 살리는 시스템

■ 세부 제안 1-4)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지원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이 되고 나면, 신불자의 꼬리표로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졸업 직후 1년 시점에 창업상태에서 다시 임시근로자로 전직(창업의 이동경로 분석결과: 창업자의 약 20% 임금근로자로 전직)한 근로자의 만족도가 창업 당시보다 낮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sup>25)</sup>. 이는 단절된 경력으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여 눈높이를 낮추었거나 경력 산정의 불이익을 보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통계다.

24) 백필규(2009), 「실패 중소기업인을 위한 패자부활센터 설립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5) 부록 참조

앞서 기술 창업의 재기 기회를 언급하였듯이 창업 이후 실패한 중소기업인(자영업자 포함) 모두에게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

졸업 직후, 대졸 청년층 역시 도소매업 또는 음식숙박업 등 전통적인 업종에서의 생계형 창업이 다수 이루어졌음이 예측되었다. 물론, 범위를 넓혀 보더라도 청년층 전체에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때, 사업유지가 어려운 자영업 창업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2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가입 자영업자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수장지원금(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 지원하였다.

<표 3-2>에서 보면 영세자영업자의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9세는 56.8%, 30~39세는 27.7%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업률 결과는 청년층 창업 실패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세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업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3-2> 2010년도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 참여자의 연령별 취업률 현황

(단위: 명, %)

연령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후 취업인원	취업인원 합계	취업률(%)
합계	1,016	754	138	183	22.9
20~29세	48	31	15	21	56.8
30~39세	212	153	33	46	27.7
40~49세	396	294	51	66	21.4
50~59세	249	193	28	36	17.9
60세 이상	110	82	11	14	16.5

주: 2011년도 7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

자영업업을 포함한 창업자 모두에게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은 창업이 갖는 위험을 국가가 어느 정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며, 이를 통해 창업정신의 고양이 이루어져 국가 전체에 또 다른 성장과 고용의 엔진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제안 2)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실용교육을 통해 창업비율을 높인 미국의 워털루대학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학교내에 accelerator center<sup>26)</sup>를 설치하고 기업들을 유치하여 학생들과 기업 CEO간의 교류를 형성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학생 스스로가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이론 역시 현장 중심으로 깊이를 더하게 하고 있다. 또한 1학기는 이론교육을 하고 차후 1학기는 기업에 취업(인턴도 아니고 자원봉사도 아닌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하여 기업실무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배운 지식(이론)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며, 스스로 학습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어 공대학생의 99.9%가 졸업 즉시 취업을 하는 상황이다. 동시에 기업활동에 대한 심도있는 내외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창업비율 또한 매우 높다(2012 글로벌 HR포럼, Feridun Hamdullahpur 워털루대 총장)고 하였다.

물론 국내에도 앞서 워털루 대학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학교내에 산학협력센터를 두고 외부기업(창업보육센터내로)을 입주시키고 있으나 이들 기업과 학생간의 교류 또는 네트워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많은 대학이 가족회사 및 대학 지주회사의 개념을 도입하여 인력교류를 시도하고 있으나 앞서 워털루 대학 같은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에서 대졸 청년층의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 타개를 위한 국가적 대응 방안은 기술창업을 통한 추가 고용창출형 창업의 육성이며, 이는 대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대학은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과 실무교육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창의적 인재를 육성·발굴하여 기술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26) 외부 기업들을 대학 내부로 유치하여 학생들과의 교류 이끌어 내는 장소



## IV. 기대효과

본고에서는 졸업 직후 대졸 청년층의 여타 경제활동 상태에서 창업으로의 또는 창업에서 다른 경제활동 상태로의 이동경로와 기술창업선택확률을 토대로 기술창업의 비중이 낮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비스업종의 생계형 창업이 아닌 추가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술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타 선진국 모두가 창업에 특히 혁신형 창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창업의 대다수는 혁신형 또는 기술창업과는 거리가 있는 서비스업종의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창업의 형태는 앞서 거론하였듯이 국가 전체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될 뿐 일자리 추가 창출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

기술창업이든 아니든 창업에 대한 지나친 환상 역시 경계해야 하겠지만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깨는 것은 창업 중심사회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창업정신 고양을 통한 혁신형, 기술창업의 확산이 그 해답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 개선, 개선된 이후 창업여건의 홍보 및 성공창업의 홍보, 창업의 위험부담을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한다는 차원의 재창업 또는 재취업의 기회제공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기술창업의 메카로써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학력보다는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과 마찬가지로 창업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의 개선은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Paradigm Shift)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둘 모두 확고한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여러 외부적 압력에 변하지 않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창업에 대한 인식개선 정책과 대학을 기술창업의 메카로써 기능하게 하는 정책을 전 부처가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면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강국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강순희·안준기(2010). 『대졸자의 실업경험의 낙인효과』,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제 28권 제 2호, p201~231.
- 김안국·이영대·한상근·유한구·장수명(2010).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정숙(2009). 『대졸자들의 취업준비 활동의 차이 및 직업이행 효과』, 교육과학연구, 제40집 제1호, p141~165.
- 김정옥(2012). 『청년창업자의 창업의지와 창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컨설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경란(2011). 『대졸 청년층의 대학 재학 중 경험한 교육서비스와 직장이동과의 관계 분석』, 한국기업교육학회, 직업교육연구, 제 30권 1호 p22~49.
- 박동·김안국·황규희·이종선·이봉주(2010). 『청년 지식기술 창업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반정호·김경희(2005).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3호 p73~103.
- 백필규(2009). 『실패 중소기업인을 위한 패자부활센터 설립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서재만(2011).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경제현안분석 제65호. 국회예산정책처.
- 성응현(2001). 『SAS를 이용한 경영통계 자료분석』, 무역경영사.
- 이영민·임정연(2010). 『대졸 초기 경력자의 자발적 이직 결정요인 및 효과분석』, 한국기업교육학회, 기업교육연구, 제 12권 1호 p129~153.
- 이지운(2011).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창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은중(2010). 『청년벤처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NGO정책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전용석·김두순(2005). 『비임금근로자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 한국의 고용구조, 제8장, pp. 264-292.
- 정미나·임영석(2010).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관련 변인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제23권 2호. p135~152.
- 차민석·안상현·이정우·김영환(2012). 『청년기업가를 위한 창업지원체계 설계와 정책

- 방안 수립』.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제 15권 제1호.
- 채구묵(2007).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4호, p35~61.
- 채창균 외(2006).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황성수(2011). 『창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중소기업청(2010). 창업지원체계 선진화 방안.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2011). MB정부 창업지원시책 분석 및 보완과제 연구. 창업진흥원.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조사(GOMS)』.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 『교육-노동시장 생애 경로조사』.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2). 『개인사업자 창·폐업 특성 및 현황 분석』.
- Feridun Hamdullahpur(2012). 워털루대학의 실용교육 발표내용, Global HR Forum(2012).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1 Global Report.

## [부록 1] 선행연구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인과적 변인들을 살펴본 정미나·임영석(2010)의 연구에 따르면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예측하는 첫째 변인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업무에 관한 전공지식의 도움정도, 즉 전공일치도 역시 주요한 조건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을 고찰한 전용석·김두순(2005)의 연구에서 지역별, 업종 및 직업, 학력 등을 변인으로 하는 로짓모형을 활용한 바 있다.

거시적으로 창업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황성수(2011)는 서비스업종의 높은 폐업률과 추가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창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확대해석<sup>27)</sup>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서비스업종의 자영업 창업에 대한 유인책을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박동·김안국·황규희·이종선·이봉주(2010)의 연구 배경은 대학 졸업은 곧 실업으로 연결되는 청년 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청년층이 지식기술 창업을 통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여 국가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앞서의 선행연구와 GEM 리포트 등을 종합하여 경기침체 속에서 청년층의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 타개를 위한 대안으로 생계형 창업이 아닌 지식기술 중심의 추가 고용창출형 창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분석에 필요한 모형과 설명변수에 대한 아이디어를 획득하였다.

27) 단순히 창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

## [부록 2]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

### 1) 분석자료

분석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교육-노동시장 생애경로 조사(1982년 졸업자, 1992년 졸업자, 2002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2009년에 조사) 데이터와 대학졸업자의 직업이동 경로조사(이하, GOMS)의 2005년 졸업자 대상의 1차(2006년 조사)와 3차(2008년 조사) 그리고 2007년 졸업자 대상의 1차(2008년 조사)와 3차(2010년 조사) 데이터이다.

먼저 생애경로조사는 2009년 시점에 조사된 데이터로 대학 졸업 직후 1년 시점과 3년 시점에 대한 회고적(retrospective) 설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1982년 졸업자는 약 23~26년전 상황에 대한 내역을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것이다. 사실 생애경로조사가 갖는 목적은 교육 제도·정책 및 환경 변화가 개인의 교육 투자수익률 및 고용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개인의 생애사 관점에서 교육-노동시장간 연계와 장기적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시점(졸업 직후)에 창업 선택 변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창업 표본 수가 작아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 쉽지 않았다. 다만 당시 창업의 비율<sup>28)</sup>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GOMS를 활용하였으며, 전문대와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국한하고 교육대를 배제하였다. 교육대의 경우,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 빈도가 극히 작아 분석대상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진입의 주요 변인(연령, 가구소득, 대학학점, 부모학력 등)을 통제하고 성별·학력(4년제와 전문대)별·전공(이공계와 비이공계)별·학교 소재지(수도권과 비수도권)별·전공일치 여부별로 기술창업의 선택확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2) 기초통계

기초 통계는 크게 생애경로조사와 GOMS를 연결하여 살펴본 결과, 눈에 띄는 결과는 생애경로조사의 1982년, 1992년, 2002년 졸업자의 졸업 직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이 매우 낮았으나 GOMS 조사의 2005년, 2007년 졸업자의 경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8) 통계적 신뢰성을 별개로 창업비율, 기술창업비중 등을 추출

<부표 1> 고용형태

(단위: 명, (%))

졸업년도		1982		1992		2002		2005		2007	
졸업 후		1년	3년	1년	3년	1년	3년	1년	3년	1년	3년
대기업	정규직	411 (20.0)	594 (29.0)	839 (28.5)	995 (33.8)	638 (21.7)	788 (26.8)	2105 (16.1)	3515 (26.8)	2353 (23.7)	2629 (26.5)
	비정규직	4 (0.2)	12 (0.6)	48 (1.6)	51 (1.7)	103 (3.5)	111 (3.8)	89 (0.7)	179 (1.4)	128 (1.3)	65 (0.7)
중소기업	정규직	619 (30.2)	741 (36.1)	755 (25.6)	835 (28.3)	912 (31.1)	1042 (35.5)	4368 (33.3)	3789 (28.9)	2778 (28.0)	3282 (33.0)
	비정규직	18 (0.9)	17 (0.8)	75 (2.5)	70 (2.4)	168 (5.7)	174 (5.9)	513 (3.9)	360 (2.7)	306 (3.1)	273 (2.7)
공공기관	정규직	116 (5.7)	157 (7.7)	299 (10.1)	390 (13.2)	114 (3.9)	236 (8.0)	1895 (14.5)	2104 (16.1)	1099 (11.1)	1452 (14.6)
	비정규직	0 (0.0)	0 (0.0)	1 (0.0)	1 (0.0)	3 (0.1)	6 (0.2)	440 (3.4)	586 (4.5)	269 (2.7)	250 (2.5)
창업		19 (0.9)	25 (1.2)	61 (2.1)	85 (2.9)	46 (1.6)	62 (2.1)	213 (1.6)	371 (2.8)	188 (1.9)	277 (2.8)
실업		863 (42.1)	504 (24.6)	870 (29.5)	521 (17.7)	953 (32.4)	518 (17.6)	537 (4.1)	520 (4)	515 (5.2)	385 (3.9)
비경활								2943 (22.5)	1679 (12.8)	2299 (23.1)	1322 (13.3)
전체		2050 (100)	2050 (100)	2948 (100)	2948 (100)	2937 (100)	2937 (100)	13103 (100)	13103 (100)	9935 (100)	9935 (100)
취업률		57.9	75.4	70.5	82.3	67.6	82.4	73.4	83.2	71.7	82.8

여기서 생애경로조사는 4년제 대졸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GOMS는 전문대 졸업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생애경로조사에서 실업 상태와 비경활을 구분하기 어려워 졸업 직후 취업률 비교는 의미부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분석데이터가 나타내고 있는 고용형태를 보여주는 정도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부표 2>는 다음 장에 소개될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평균값에 대한 기초통계표이다.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2005년 졸업자들의 2006년 창업 및 직업선택, 2008년의 창업과 직업선택, 2007년 졸업자들의 2008년 창업 및 직업선택, 2010년의 창업 및 직업선택을 개별적인 표본으로 나열<sup>29)</sup>하여 창업 및 임금근로를 선택한 근로자의 특성을 분석하였기에 전체적으로 분석 대상의 표본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9) pooling data화: 시계열이 짧아 분석이 용이치 않을 경우, 이를 횡단면으로 연결하여 가용 데이터의 양을 확대하여 분석하는 방법

<부표 2> 통계변수 기초통계표

		전공 일치도	성별	연령	학력	대학 소재지	부모 학력	대학 평점	가구 소득	만족도
전체	평균	.520	.549	27.805	.650	.222	21.693	3.428	420.694	.900
	표준 편차	.500	.498	4.845	.477	.416	5.945	1.125	267.786	.299
	사례수	35,051	89,188	89,168	87,712	89,188	82,572	88,456	70,158	46,101
대기업	평균	.548	.605	28.203	.751	.289	22.046	3.478	449.347	.911
	표준 편차	.498	.489	4.562	.432	.453	6.087	1.107	262.081	.285
	사례수	12,163	24,086	24,081	22,872	24,086	22,331	23,930	23,493	17,129
중소기업	평균	.497	.546	27.444	.576	.171	21.151	3.401	409.661	.894
	표준 편차	.500	.498	4.481	.494	.377	5.726	1.101	262.777	.308
	사례수	15,897	30,941	30,933	30,915	30,941	28,595	30,729	29,951	20,822
창업	평균	.492	.613	33.153	.519	.152	20.194	3.586	489.853	.938
	표준 편차	.500	.487	8.735	.500	.359	6.500	1.163	340.094	.242
	사례수	1,821	3,200	3,199	3,200	3,200	2,803	3,152	3,100	2,465
기술창업 업종	평균	1.000	0.770	35.821	0.506	0.171	19.250	3.512	549.008	0.958
	표준 편차	0.000	0.421	9.140	0.501	0.377	6.887	1.212	359.144	0.201
전공일치 창업	사례수	257	257	257	257	257	212	252	249	215
기타업종	평균	0.000	0.728	32.405	0.480	0.116	19.369	3.405	480.775	0.876
	표준 편차	0.000	0.445	8.820	0.500	0.320	6.094	1.221	334.674	0.330
전공불일치 창업	사례수	925	925	925	925	925	832	909	895	660

전공일치도는 전공일치(1), 불일치(0) 중간값은 배제, 만족도 역시 동일한 방식, 학력변수 대졸(1), 전문대(0), 대학소재지 서울(1), 나머지(0), 성별 남자(1), 여자(0)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성별은 1에 가까울수록 남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며 전체 취업자의 성별 평균값이 0.549임을 확인하면 전체적으로 취업자 중에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높다는 것이고 또한 전체 평균 성별 값(0.549)을 기준으로 대기업(0.605)과 비교하면 남성이 대기업에 더욱 많이 취업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나머지 변수인 가구소득은 실제값을 넣었으며 부모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을 교육연수로 환산하여 합하는 형태로 가공하였고 대학 평점은 5점만점의 5점 척도값을 사용하였다.

〈부표 3〉 창업 업종별·전공일치여부별 분포

창업종류	대학 소재지	전공	학력		전체
			전문대	일반대	
기술창업 업종 전공일치	비수도권	이공계	124	89	213
			14.0%	9.5%	11.7%
	수도권	이공계	3	41	44
			0.3%	4.4%	2.4%
	계	이공계	127	130	257
			14.3%	13.9%	14.1%
		소계	127	130	257
기타창업 업종 전공일치	비수도권	비이공계	267	277	544
			30.1%	29.6%	29.9%
	수도권	비이공계	11	84	95
			1.2%	9.0%	5.2%
	계	비이공계	278	361	639
			31.4%	38.6%	35.1%
		소계	278	361	639

기술창업이 가능한 업종(제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 이공계 출신의 전공일치 창업은 전체 창업 중에 약 14.1%에 불과하였고 기타 업종(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에 전공과 일치하지 않은 창업은 전체 창업 중에 절반이 넘는 50.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GEM(2011)의 성장형 창업의 비율이 선진국(23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과 일치하는 통계이다.



<부표 3> 창업 업종별·전공일치여부별 분포(계속)

창업종류	대학 소재지	전공	학력		전체	
			전문대	일반대		
기타창업 업종 전공불일치	비수도권	비이공계	246	216	462	
			27.8%	23.1%	25.4%	
		이공계	210	146	356	
				23.7%	15.6%	19.5%
			소계	456	362	818
	수도권	비이공계	10	60	70	
			1.1%	6.4%	3.8%	
		이공계	15	22	37	
				1.7%	2.4%	2.0%
			소계	25	82	107
	계	비이공계	256	276	532	
			28.9%	29.5%	29.2%	
이공계		225	168	393		
			25.4%	18.0%	21.6%	
		소계	481	444	925	
전체	비수도권	비이공계	513	493	1006	
			57.9%	52.7%	55.2%	
		이공계	334	235	569	
				37.7%	25.1%	31.2%
			소계	847	728	1575
	수도권	비이공계	21	144	165	
			2.4%	15.4%	9.1%	
		이공계	18	63	81	
				2.0%	6.7%	4.4%
			소계	39	207	246
	계	비이공계	534	637	1171	
			60.3%	68.1%	64.3%	
이공계		352	298	650		
			39.7%	31.9%	35.7%	
		전체	886	935	1821	

- 주: 1. 기술창업 업종에 전공불일치 창업은 존재하지 않음  
 2. 기술창업 업종: 제조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보건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기타 업종: 기타서비스업

## [부록 3] 기술창업 선택확률 모형 분석결과

### <부표 1> 모형 적합정보

모형	모델 맞춤 기준	우도비 검정		
	-2 로그 우도	카이 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 만	41,161.585			
최종모형	38,370.292	2791.293	18	0.000

### <부표 2> 변수별 우도비 검정

효과	모델 맞춤 기준	우도비 검정		
	축소모형의 -2 Log 우도	카이 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	38,370.292a	0.000	0	
연령	39,221.276	850.984	2	.000
대학학점	38,475.675	105.383	2	.000
부모학력	38,396.272	25.980	2	.000
가구소득	38,482.474	112.182	2	.000
전공(이공계/비이공계)	38,523.974	153.682	2	.000
성별(남성/여성)	38,421.541	51.249	2	.000
학력(대졸/전문대졸)	38,921.498	551.206	2	.000
학교소재지(서울/지방)	38,680.513	310.221	2	.000
전공일치도(일치/불일치)	38,375.457	5.165	2	.076

<부표 3> 분석 결과표

구분 <sup>a</sup>	B	표준 오차	Wald	자유도	유의 확률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중소 기업	절편	3.008	.131	529.777	1	.000		
	연령	-.045	.004	157.317	1	.000	.956	.950 .963
	졸업학점	-.122	.012	104.065	1	.000	.885	.865 .906
	부모학력	-.012	.002	25.716	1	.000	.988	.983 .992
	가구소득	.000	.000	44.557	1	.000	1.000	1.000 1.000
	성별	-.203	.030	46.015	1	.000	1.225	1.155 1.299
	이공계	-.265	.028	88.917	1	.000	.767	.726 .811
	비이공계	0 <sup>b</sup>			0			
	일반대	-.701	.031	519.715	1	.000	.496	.467 .527
	전문대	0 <sup>b</sup>			0			
	서울소재	-.556	.033	280.490	1	.000	.573	.537 .612
	지방소재	0 <sup>b</sup>			0			
	전공일치	.016	.027	.364	1	.546	1.017	.964 1.072
	전공불일치	0 <sup>b</sup>			0			
창업	절편	-.939	.062	227.025	1	.000		
	연령	.084	.004	356.175	1	.000	1.088	1.079 1.098
	졸업학점	-.052	.026	3.988	1	.046	.950	.903 .999
	부모학력	-.009	.005	3.125	1	.077	.991	.981 1.001
	가구소득	.001	.000	40.869	1	.000	1.001	1.000 1.001
	성별	.022	.063	.124	1	.725	.978	.865 1.107
	이공계	-.624	.062	102.091	1	.000	.536	.475 .605
	비이공계	0 <sup>b</sup>			0			
	일반대	-.673	.065	108.448	1	.000	.510	.449 .579
	전문대	0 <sup>b</sup>			0			
	서울소재	-.692	.082	71.954	1	.000	.501	.427 .587
	지방소재	0 <sup>b</sup>			0			
	전공일치	-.115	.059	3.819	1	.051	.892	.795 1.000
	전공불일치	0 <sup>b</sup>			0			

a. 참조 범주는 대기업.

b. 이 모수는 중복되었으므로 0으로 설정됩니다.

## [부록 4] 창업 선택확률 모형

## 〈부표 1〉 모형 적합정보

모형	모델 맞춤 기준	우도비 검정		
	-2 로그 우도	카이 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 만	41,161.585			
최종모형	38,370.292	2791.293	18	0.000

## 〈부표 2〉 변수별 우도비 검정

효과	모델 맞춤 기준	우도비 검정		
	축소모형의 -2 Log 우도	카이 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	38,370.292a	0.000	0	
연령	39,221.276	850.984	2	.000
대학학점	38,475.675	105.383	2	.000
부모학력	38,396.272	25.980	2	.000
가구소득	38,482.474	112.182	2	.000
성별(남성/여성)	38,421.541	51.249	2	.000
전공일치도(일치/불일치)	38,375.457	5.165	2	.076
전공(이공계/비이공계)	38,523.974	153.682	2	.000
학력(대졸/전문대졸)	38,921.498	551.206	2	.000
학교소재지(서울/지방)	38,680.513	310.221	2	.000

<부표 3> 분석 결과표

구분 <sup>a</sup>	B	표준 오차	Wald	자유도	유의 확률	Exp (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중소 기업	절편	3.025	.134	512.217	1	.000		
	연령	-.045	.004	157.317	1	.000	.956	.950 .963
	졸업학점	-.122	.012	104.065	1	.000	.885	.865 .906
	부모학력	-.012	.002	25.716	1	.000	.988	.983 .992
	가구소득	.000	.000	44.557	1	.000	1.000	1.000 1.000
	성별	-.203	.030	46.015	1	.000	1.225	1.155 1.299
	전공일치	.016	.027	.364	1	.546	.984	.933 1.038
	이공계	-.265	.028	88.917	1	.000	.767	.726 .811
	비이공계	0 <sup>b</sup>			0			
	일반대	-.701	.031	519.715	1	.000	.496	.467 .527
	전문대	0 <sup>b</sup>			0			
	서울소재	-.556	.033	280.490	1	.000	.573	.537 .612
	지방소재	0 <sup>b</sup>			0			
창업	절편	-.954	.064	223.195	1	.000		
	연령	.084	.004	356.175	1	.000	1.088	1.079 1.098
	졸업학점	-.052	.026	3.988	1	.046	.950	.903 .999
	부모학력	-.009	.005	3.125	1	.077	.991	.981 1.001
	가구소득	.001	.000	40.869	1	.000	1.001	1.000 1.001
	성별	.022	.063	.124	1	.725	.978	.865 1.107
	전공일치	-.115	.059	3.819	1	.051	1.121	1.000 1.258
	이공계	-.624	.062	102.091	1	.000	.536	.475 .605
	비이공계	0 <sup>b</sup>			0			
	일반대	-.673	.065	108.448	1	.000	.510	.449 .579
	전문대	0 <sup>b</sup>			0			
	서울소재	-.692	.082	71.954	1	.000	.501	.427 .587
	지방소재	0 <sup>b</sup>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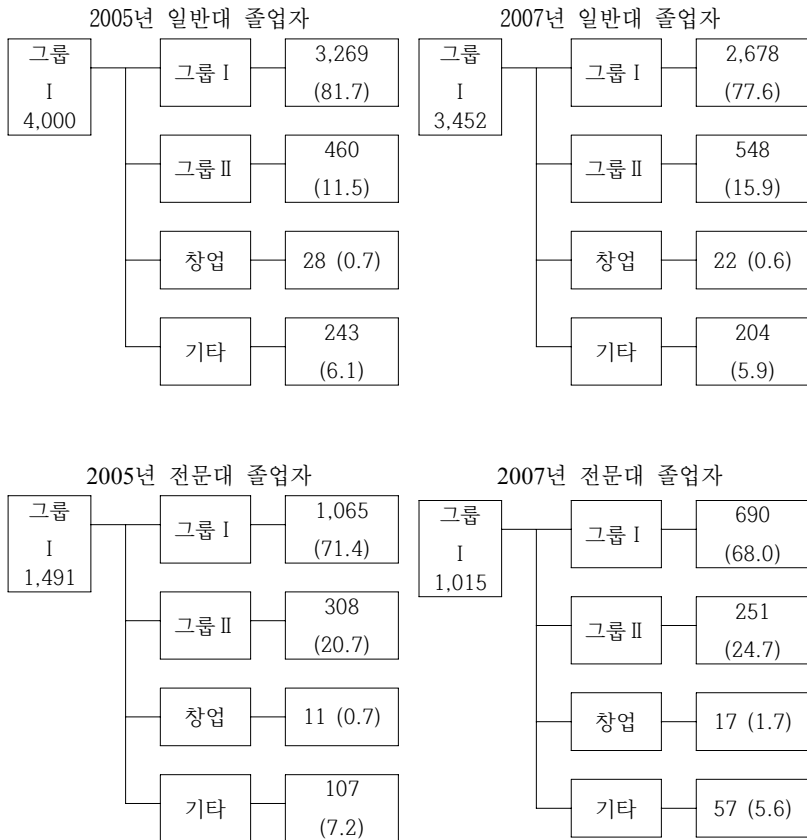
a. 참조 범주는 대기업.

b. 이 모수는 중복되었으므로 0으로 설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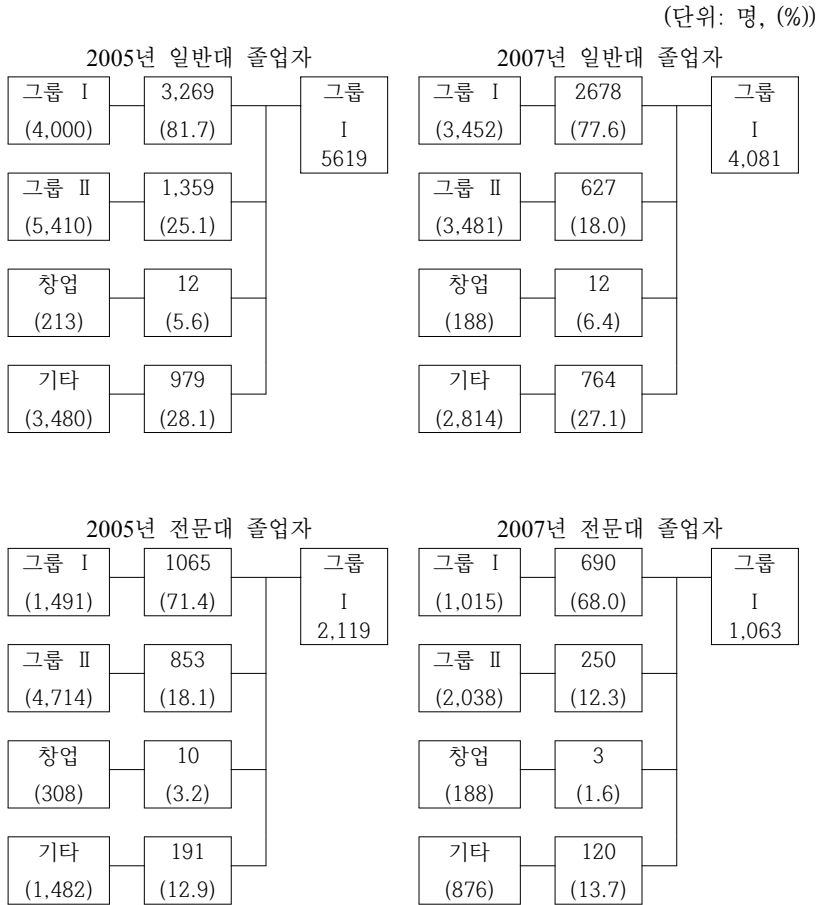
## [부록 5] 각종 부표

<부표 1> 졸업 직후 그룹 I 에서 졸업 이후 3년 시점으로의 경제활동 변화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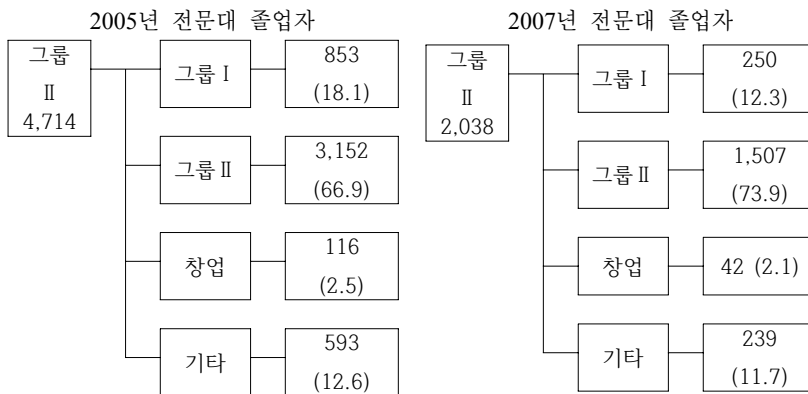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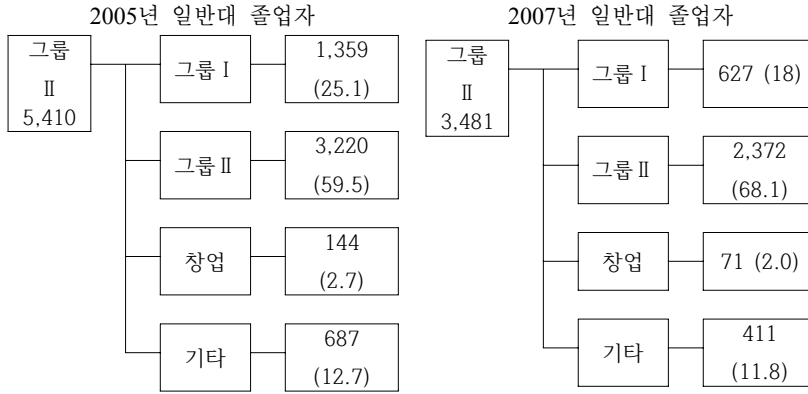


<부표 2> 졸업 이후 3년 시점에 그룹 I 을 선택한 청년층의 졸업 직후 1년 시점에서의 경제활동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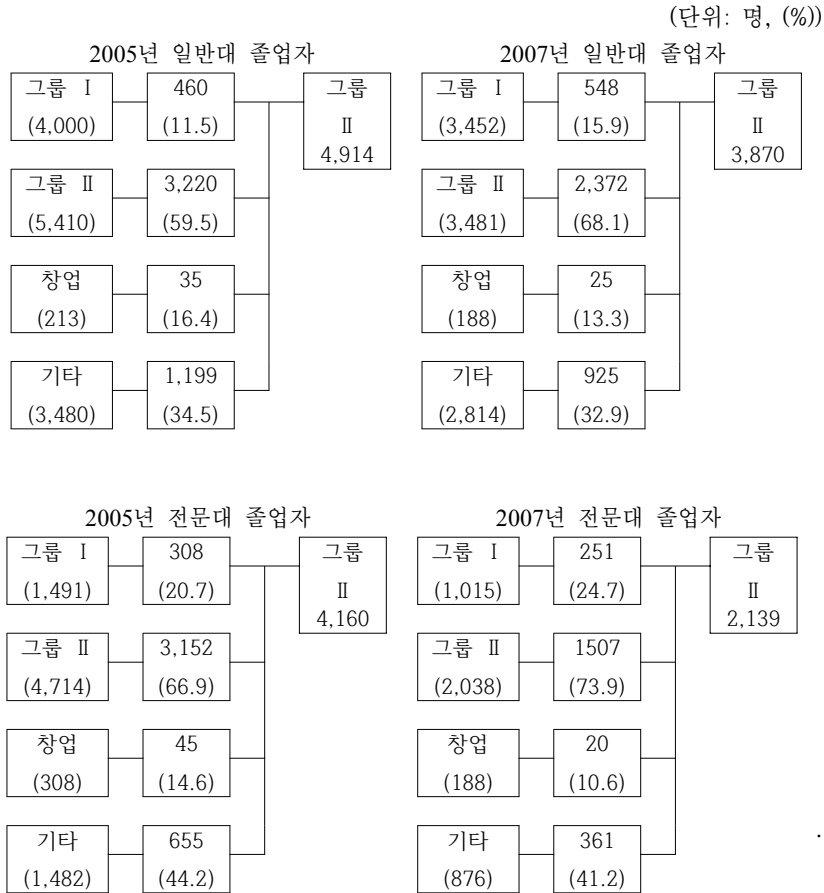
<부표 3> 졸업 직후 그룹 II에서 졸업 이후 3년 시점에서의 경제활동 변화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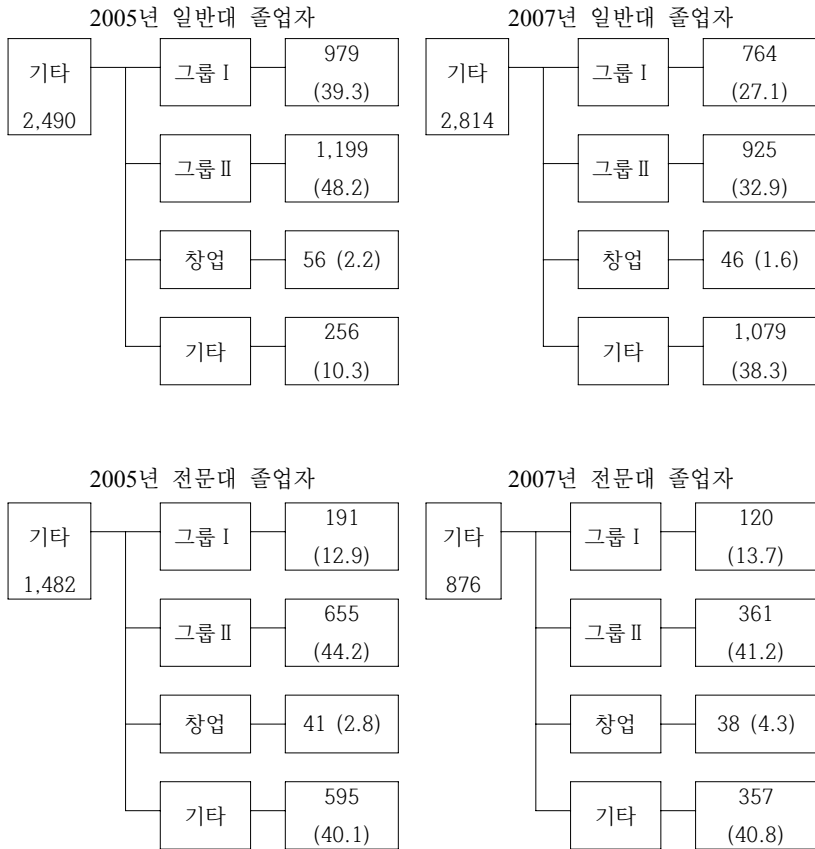


<부표 4> 졸업 이후 3년 시점에 그룹 II을 선택한 청년층의 졸업 직후 1년 시점에서의 경제활동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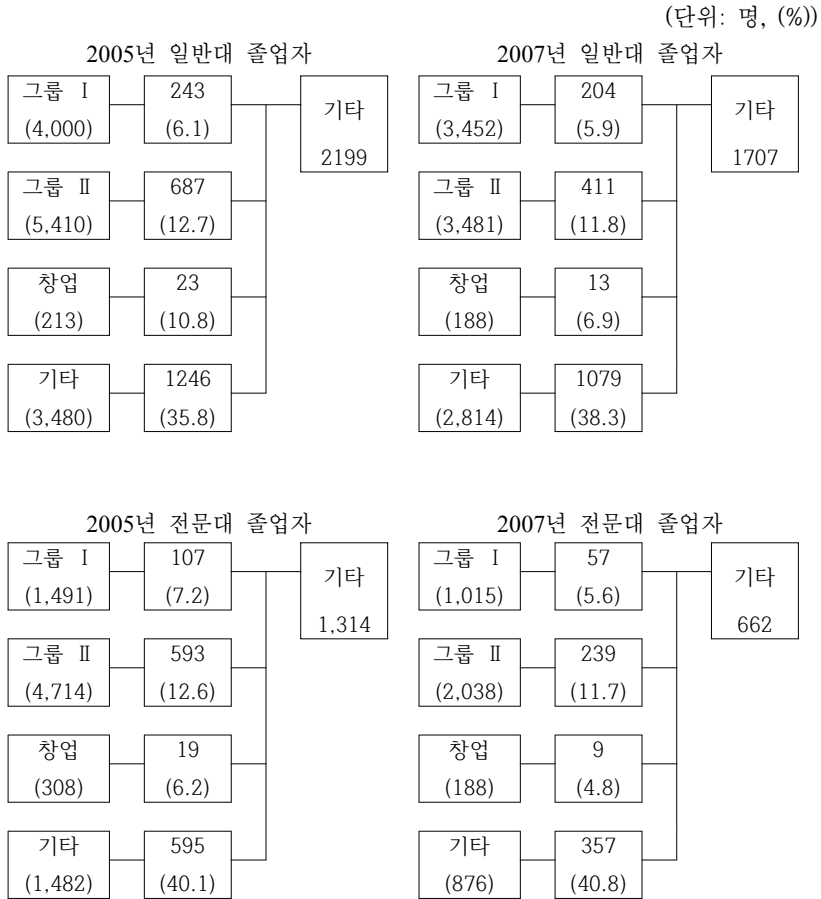


<부표 5> 졸업 직후 기타에서 졸업 이후 3년 시점에서의 경제활동 변화

(단위: 명, (%))



<부표 6> 졸업 이후 3년 시점에 기타를 선택한 청년층의 졸업 직후 1년 시점에서의 경제활동 내역



<부표 7> 졸업 직후 창업에서 졸업 이후 3년 시점에서의 만족도 차이

4년제	창업	⇒	그룹 I	관측수	Std. Dev.	t-value
	75.00		64.58	24	33.72	1.5136
	창업	⇒	그룹 I + 중소기업 정규직	관측수	Std. Dev.	t-value
	72.73		67.42	66	27.22	1.5830
	창업	⇒	임금근로자 전체	관측수	Std. Dev.	t-value
	71.13		66.37	84	26.17	1.6677
	창업	⇒	창업	관측수	Std. Dev.	t-value
	74.02		71.44	281	26.22	1.6495

전문대	창업	⇒	그룹 I	관측수	Std. Dev.	t-value
	73.08		75.00	13	31.39	-0.2209
	창업	⇒	그룹 I + 중소기업 정규직	관측수	Std. Dev.	t-value
	69.84		71.43	63	25.35	-0.4970
	창업	⇒	임금근로자 전체	관측수	Std. Dev.	t-value
	69.81		70.13	77	25.81	-0.1104
	창업	⇒	창업	관측수	Std. Dev.	t-value
	69.92		68.25	389	25.52	1.2915

- 주: 1. 그룹 I : 대기업-정규직, 공공기관-정규직  
 2. 그룹 III : 대기업-정규직, 공공기관-정규직, 중소기업-정규직  
 3. \*\* 신뢰도 99%, \* 신뢰도 95%

<부표 8> 졸업 직후 창업에서 졸업 이후 3년 시점으로의 전공일치도 차이

4년제	창업	⇒	그룹 I	관측수	Std. Dev.	t-value
	55.77		36.54	13	52.20	1.3284
	창업	⇒	그룹 I + 중소기업 정규직	관측수	Std. Dev.	t-value
	40.79		34.21	38	42.19	0.9613
	창업	⇒	임금근로자 전체	관측수	Std. Dev.	t-value
	40.87		32.69	52	40.13	1.4685
	창업	⇒	창업	관측수	Std. Dev.	t-value
54.87	48.44		272	31.93	3.3235**	

전문대	창업	⇒	그룹 I	관측수	Std. Dev.	t-value
	54.55		34.09	11	45.85	1.4796
	창업	⇒	그룹 I + 중소기업 정규직	관측수	Std. Dev.	t-value
	33.51		35.64	47	34.12	-0.4276
	창업	⇒	임금근로자 전체	관측수	Std. Dev.	t-value
	32.63		33.47	59	33.79	-0.1927
	창업	⇒	창업	관측수	Std. Dev.	t-value
53.13	45.05		384	32.37	4.8877**	

<부표 9> 졸업 이후 3년 시점에서 창업을 선택한 졸업 직후 1년 시점과의 전공일치도 차이

4년제	그룹 I	⇒	창업	관측수	Std. Dev.	t-value
	62.50		46.43	28	30.59	2.7799**
	그룹 I + 중소기업 정규직	⇒	창업	관측수	Std. Dev.	t-value
	44.41		39.51	143	35.26	1.6600
	임금근로자 전체	⇒	창업	관측수	Std. Dev.	t-value
	44.00		39.71	175	34.68	1.6347

전문대	그룹 I	⇒	창업	관측수	Std. Dev.	t-value
	22.73		22.73	11	38.73	0.0000
	그룹 I + 중소기업 정규직	⇒	창업	관측수	Std. Dev.	t-value
	46.82		40.23	110	32.95	2.0979*
	임금근로자 전체	⇒	창업	관측수	Std. Dev.	t-value
46.12	40.12		129	35.46	1.9242	

<부표 10>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유형별 운영 현황(2009-2011)

유형	사업명	소관 부처	지원 내용	예산 및 시행년도
창업 교육	대학 창업 강좌	중소기업청	- 대학생 창업 교육을 위해 창업 강좌 운용비용 지원(400~750만 원)	4.5억 원 (2010년)
	창업 동아리 지원	중소기업청	- 창업 아이템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300~800만 원)	7억 원 (2010년)
	창업 대학원 지원	중소기업청	- 창업 예비자 및 창업 전문가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5개 대학	16억 원 (2010년)
	기술 창업 학교	중소기업청	- 예비 기술 창업자에게 담당 멘토 지정 및 이론·실습 교육27개 기관	15.5억 원 (2010년)
	뉴미디어 창업 스쿨	문화관광체육부	- 뉴미디어 분야의 창업을 위해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6억 원 (2009년)
	MOT 사업	지식경제부	- 지식·기술 경영 능력을 겸비한 고급 테크노 매니저 양성	58억 원 (2010년)
	하이 서울 창업 스쿨	서울특별시	- 창업 교육, 컨설팅 및 신용 보증 지원	9.5억 원 (2010년)
경진 대회	중소 벤처 창업 경진대회	중소기업청	-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8억 원 (2010년)
	소셜 벤처 경연 대회	고용노동부	- 청년 사회적 기업가의 창업 촉진 지원	12억 원 (2010년)
사업화 지원	예비 기술 창업자 육성	중소기업청	- 예비 기술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	494억 원 (2010년)
	2030청년 창업 프로젝트	서울특별시	- 사업화 단계의 아이디어 발굴 및 육성,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창업 공간 등 제공	192억 원 (2010년)
	대학 창업 300 프로젝트	대전광역시	- 창업 교육, 네트워킹, 컨설팅 및 신용 보증 지원	32억 원 (2010년)
	청년창업 사관학교	중소기업청	- 3년 이내 초기기업의 CEO를 선발하여 창업 단계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	180억 원 (2011년)
기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중소기업청	- 창업 붐 조성과 창업자 발굴, 기존의 창업 지원사업 보완 및 강화	305억 5,000만 원 (2011년)
	청년창직·창업 인턴제사업	고용노동부	- 인턴제사업을 통하여 현장 실무경험과 교육을 제공, 성공적인 창직 및 창업	102억 (2011년)
	비즈쿨지원 사업	중소기업청	청소년의 창업 및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 학교당 교육 및 운영소요비용 1,100~7,000만 원	(2011년)

자료: 박동 외(2010), 이지운(2011) 재인용.



□ 저자 약력

- 황성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 류지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대졸 청년층의 졸업 직후 창업 실태 분석 및 정책 제언

- 발행연월일    2012년 12월 8일 인쇄  
                  2012년 12월 10일 발행
- 발 행 인    박 영 범
- 발 행 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7길 46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2)3485-5000, 5100  
                  팩 스: (02)3485-5200
- 등 록 일 자    1998년 6월 11일
- 등 록 번 호    제16-1681호
- I S B N    978-89-6355-405-1 93330
- 인 쇄 처    (주)범신사 (02)720-9786